

산림청 어디로 가야하나

— 환경부에 흡수통합은 잘못된 발상 —
통합할바엔 농림부에 가야한다

최 동 균 / 본회 전무이사

최근 일간신문(동아일보 1997. 12. 5자) 보도에 의하면 정부조직 대폭 감축에 산림청이 환경부에 흡수 통합하는 것으로 보도 되었다. 산림청의 존폐문제는 과거 행정개혁쇄신위원회의 조사 결과에서도 폐지되는 것으로 기히 알려진 사실이 있었고, 이번에 폐지문제가 다시금 거론되고 있으나 임업인들조차도 과거와 같이 충격적으르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느낌이다. 그만큼 시대상황이 급박히 변하였고 최초의 일도 아닌 까닭에 면역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산림청을 계속 존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운동의 움직임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을 보니 이제는 숙명과도 같이 받아들여져야 할 운명에 처해있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기왕에 산림청을 폐지하려거든 환경부에 흡수통합하지 말고 농림부에 합병하기를 강력히 주장하고자 한다.

그 이유인즉

첫째, 임업은 하나의 산업이고 산림

청은 그 임업을 총괄 관장하는 부서이다. 산림청을 환경부에 흡수하여야 한다는 발상이 산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공익기능의 생산공장이라는 점에서 또 산림은 목재생산위주의 기능은 이미 경쟁력이 없이 취약해졌고 환경임업에 비중을 둘 때라는 발상에서 나왔음직 하다.

비록 임업이 오늘날 경쟁력을 잃어 산업으로서의 재구실을 못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임업은 하나의 산업으로서 존재하여야 하는 당위성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그러한 산업을 관장하는 부서가 같은 일차산업 관장부서인 농림부를 제쳐두고 산업부서가 아닌 환경부에 합병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

산림경영은 나무를 심고 가꾸고 벌기령이 되면 벌채를 해서 수익을 얻어야 하고 그 자리에 다시 나무를 심고 가꾸기를 반복해서 소득을 얻는 산업이다. 그러한 반복 작업을 하는 가운데 공익기능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산되는 것이

고 또 소득을 올려야 산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산림경영은 미화를 목적으로 한 환경조경 식재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둘째, 임협의 존폐등 부차적인 문제들이 많다. U·R 협상 이후 농협, 축협, 수협 및 임협등 농림부 산하의 조합이 하나로 통합해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저간의 전문가들의 주장이 있었고 또 그와 관련하여 관계전문가들의 회합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I.M.F의 치욕적사건은 어차피 이들 조합들을 하나의 가치 「농업은행」으로 통폐합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왔다고 본다. 그렇다면 만약 산림청이 환경부쪽으로 흡수된다고 할 때 임협도 과연 환경부 산하조합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임협은 그대로 농업은행(가칭?)쪽에 같이 붙는 것인가? 아무래도 부자연스런 일이다.

그렇다면 임협만이 단독 환경부 산하에 있음을 가상해 보아야 한다. I.M.F 치욕적 사건은 철저한 시장경제 원리의 적자생존의 원칙을 기조로 하고 있다.

기존의 다른 조합들도 합병을 해서도 대항이 될런지가 의심스런 판에 임협이 환경부 산하에서 단독유지가 가능할 것인가? 현재의 모든 국고 보조금은 물론 각종 사업예산도 현재보다도 원할하지 않을 때 임협의 단독유지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지?

임협은 그동안 일부산주들의 부정적 시각에서 비판을 받아온것도 사실이지만 산주들과 미운정 고운정이 들었고 임협으로 탈바꿈 되면서부터 산주 임업인들의 금융창고로 정착이 되어가는 단계이고 앞으로도 임업발전의 중요한 역할기능을 담당해야 할 입장이다.

임협이 모처럼 기반이 형성되어가는 현시점에서 존폐문제가 거론될 경우 산주조합원들의 실망과 허탈은 무엇으로 보상될 수 있으며 임업의 장래는 어찌 될 것인지 의구심이 많아진다.

본인의 소견으로는 임협도 무조건 농림부 소관의 「농업은행 - 가칭」으로 함께 합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임협도 산주도 이나라 임업도 함께 사는 길임을 확신한다.